

#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함의\*

정규식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

본 논문은 중국 신노동자 집단의 공동체 운동을 위로부터의 국가 도시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계기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도농이원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중국 신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도시에서의 제도적·신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들의 사회적 불만과 저항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도시화 정책은 또 다른 차등적 사회질서와 시민권의 위계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도시공간에서 여전히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신노동자들은 ‘사회건설’ 과정에만 동원되고 ‘사회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를 근거지로 새로운 생산방식을 고민하고, 재생산의 필요를 자율적으로 충족하며, 이를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버넌스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이들의 실천과 경험은 국가 제도와 자본 논리가 규정하고 허용하는 ‘권리’를 넘어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상상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주제어** 중국 신노동자, 베이징 노동자의 집, 도농이원구조, 시민권의 위계화, 도시에 대한 권리, 사회 거버넌스

## I. 들어가며

전환이 시작되었다. 전환은 24시간 주기로 실행된다. 지금이 바로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공간 전환 시점이다. 세상이 뒤집힌다. ...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도시 하나가 자신의 몸을 접어 지면을 향해 수렴한다. 빌딩들이 비천한 중복이 그러듯 고분고분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잘라 머리와 발이 맞닿게 한다. 그런 다음 머리와 팔을 구부리고 접어 틈새로 밀어 넣는다. 마천루는 접힌 다름 새롭게 조립된다. 수축되어 자리 잡은 모양새가 마치 루빅큐브를 보는 듯하다. 뻑뻑하게 서로 몸을 붙이고서 한데 모여 깊은 잠에 빠진다. 그런 다음 지면이 뒤집힌다. 작게 분할된 구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8096371).

역별로, 땅덩이가 축을 중심으로 180도 빙글 돌아 반대쪽 면을 드러낸다. 반대쪽 세계의 건축물이 지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빌딩들이 접힌 상태에서 몸을 펴 일어난다(하오징팡, 2018: 19, 21-22).

위 인용 글은 2016년 최고 권위의 SF 문학상인 휴고상(Hugo Award)을 받은 하오징팡(郝景芳)의 중편소설 「접는 도시」에 나오는 거대도시 베이징의 미래 전경이다. 엄청나게 불어난 베이징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고위 관료와 정책 개발자들은 네모반듯한 큐브 형태로 도시를 접어 24시간을 주기로 지반을 뒤집는다는 기발한 방식을 고안한다. 이 ‘접는 도시’는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지의 한쪽 면은 500만 명이 사는 제1 공간으로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가 할당된다. 제1 공간이 휴면에 들어가면 대지가 뒤집히고, 반대쪽의 제2, 제3 공간의 활동이 차례로 시작된다. 제2 공간의 인구는 2,500만 명이고, 둘째 날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가 할당된다. 제3 공간에는 5,0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가 활동 시간이다. 이처럼 제1 공간 사람들은 지반의 한쪽 면과 24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데, 이에 반해 제2 공간과 제3 공간 사람들은 지반의 다른 한쪽 면을 함께 사용하기에 나머지 24시간 중 각각 16시간과 8시간만을 할당받는다. 즉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자원으로 여겨졌던 시간이 ‘접는 도시’에서는 공간을 기준으로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방식으로 분배”된다(하오징팡, 2018: 22). 이러한 ‘불평등한 시간 배분’으로 대부분이 쓰레기 처리 노동자인 제3 공간 사람들은 48시간 중 8시간만 깨어 있고, 나머지 40시간은 최면 가스를 마시고 강제로 잠들어야 한다.

소설 속 ‘접는 도시’는 공간 전환을 통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가상의 미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쑤리핑(孙立平)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 중국의 거대도시는 이미 현실에서 ‘단절된 사회[断裂的社会]’를 경험하고 있다(孙立平, 2012). 그리고 단절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질적 생활 수준과 생존의 환경은 서로 다른 시대에 놓여 있다. 예컨대 베이징 중심에는 오피스텔, 금융센터, 쇼핑몰, 고급 아파트가 가득하며, 도시의 중산계급 아파트 지하실에는 청소 노동자, 경비원,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시 외곽에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노동자[新工人]’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간

다(정규식, 2019). 여기서 말하는 신노동자는 “호적 신분상 농민으로 농촌에 토지를 갖고 있지만, 주로 농업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주요 소득수단으로 삼는 사람”(中国国务院研究室课题组, 2006)을 지칭하던 ‘농민공(农民工)’을 대체하려는 개념이다.<sup>1</sup> 주지하듯이 195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호적제도를 통해 도시 주민과 농민을 분리하는 ‘도농이원구조’를 제도화했으며, 개혁개방 과정에서 농민공의 저임금 노동에 기초해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을 추동했다. 그러나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도시발전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사회에 단절이 발생했고, 신노동자 집단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뤼투(吕途)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기 중국의 사회문제이다. 신노동자 집단의 형성은 개혁개방과 포스트 사회주의 시기에 진행된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새로운 정세의 산물이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책과 법률, 윤리 규범, 도농관계와 사회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뤼투, 2017).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2000년대 이후부터 농민공 문제 해결을 사회질서 유지와 정치체제 안정을 위한 중대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도시화 계획과 경제발전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국 신노동자들은 여전히 비(非)시민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도시에서도 배제와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신노동자들이 도시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저항을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는 르페브르(Henry Lefebvre)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이

<sup>1</sup> 중국 농민공은 개혁개방 이후 소유제의 다원화, 기업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출현한 집단으로서 이제까지 민공(民工), 품팔이[打工者], 공돌이[打工仔], 공순이[打工妹] 맹목적 유동인구[盲流], 외래공(外来工)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 왔으며, 최근까지도 농민공들은 농촌 호적 소유자라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모호한 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뤼투(吕途)는 ‘농민공’이라는 용어는 이제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으며,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신노동자’로 규정한다(뤼투, 2017).

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의 기본 전제는 도시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집합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재산이나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또 나이, 성별, 계층,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차별이나 배제 없이 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도시라는 인간의 ‘집단적 작품’을 함께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강현수, 2010: 12). 이처럼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 사유 재산권보다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강조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그 자체에 도전하는 혁명적 관점을 배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별 도시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고 심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넘어서려는 이론적 논의들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메리필드(Andy Merrifield)는 상파울루에서 살아가는 “전통적인 농촌의 과거에서 차단되었으면서 현대적 미래의 걸치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들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작업의 개념으로서도,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도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되기에는 여전히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메리필드, 2015: 18). 따라서 ‘텅 빈 기표’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넘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기획과 투쟁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한 ‘마주침의 정치’로 분석의 초점을 옮길 것을 제안한다. 서영표도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통해 르페브르의 주장이 갖는 급진적 사회비판의 가능성을 되살릴 필요를 제기한다. 즉 르페브르의 주장을 ‘도시’와 ‘권리’라는 추상적 담론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에 의하면 도시 문제는 추상적인 ‘도시성(urbanity)’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생산, 재생산, 소비, 거버넌스, 정체성이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 경험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체제 안에서 허용된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권리’ 담론을 넘어 제도정치와 체제를 변화시킬 잠재력과 상상력을 지닌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서영표, 2012).<sup>2</sup>

<sup>2</sup> 이를 위해 서영표는 ‘필요’ 개념을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더욱 급진화하고자 시도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도시관리 정책과 신노동자의 삶이 도시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어떻게 마주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베이징 노동자의 집[北京工友之家]’의 공동체 운동과 실천 사례를 통해 정부 당국의 사회관리와 지역사회 기반 풀뿌리 운동의 긴장과 접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일부 진행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조직에 관한 소개 및 노동자 문화 운동에 대한 담론 분석과 신노동자로의 정체성 변화에만 주로 주목한 측면이 있다(장윤미, 2012; 박민호, 2015; 김미란, 2016; 김정수 2017; 박자영, 2019). 이 글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연계하여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 갖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탐색해 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먼저 2000년대 이후 국가 주도 도시화 계획과 사회건설 과정에서 배제된 신노동자들의 삶을 간략히 조명하고, 이어서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민(公社) 공동체의 경험이 지닌 실천적 의미를 짚어 볼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농민공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하고, 신노동자로 자신들을 호명하며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신노동자 집단의 공동체 운동을 위로부터의 국가발전 및 도시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계기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고민하고, 재생산과 관련된 필요를 시장의 바깥에서, 때로는 국가에 저항하고 때로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 영역 안에서 충족하며, 시장의 힘에 맡겨져 있는 소비의 영역을 사용가치의 원리를 통해 재조직화하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실천을 통해 거버넌스의 구조를 전변시켜 내는 과정은 전문가들의 권리 담론의 해석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서영표, 2012: 82).

## II. 중국 ‘도시관리’ 정책과 ‘신노동자 권리’의 마주침

### 1. 국가 주도 도시화 계획과 위계화된 시민권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나아가 글로벌 정치경제를 선도하는 G2 국가로 우뚝 선 중국의 부상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을 수반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에는 상주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18개, 5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91개,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47개 있으며,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1949년 10.64%에서 2021년 64.72%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약 10억 5,000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으로 추정된다(王德培, 2022). 그러나 2021년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여전히 45% 정도에 머물러, 호적 신분상의 제약과 차별을 받는 유동인구가 약 2억 5,0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 유동인구로 분류되는 농민공은 2021년 기준 약 2억 9,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도적·비제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国家统计局, 2021).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대부분 국가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중국의 경우 호적제도에 기초한 도시-농촌 이원구조 속에서 농민공은 언제나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 존재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중국 사회에서 농민공 신분의 이중성, 주변성, 모순성은 곳곳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농민공은 실제 주거하고 있는 도시에서 적법한 시민 혹은 공민 신분을 갖춘 존재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등 시민 혹은 비(非)시민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도시 생활에서 제도적으로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취업차별, 고용불안, 저임금 및 고강도의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제도 수혜의 제약,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자녀들에 대한 학교 교육제도의 결여, 농촌에 남겨진 노인과 아동의 양육 문제 등 농민공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정규식, 2019).<sup>3</sup> 즉 도시와 농촌 주

<sup>3</sup> 호적제도를 통한 중국 도농이원구조의 형성과 이로 인한 이원적 노동관계의 변용과 지속, 그리고 농민공이 도시에서 겪는 제도적·비제도적 차별에 대해서는 정규식(2019)을 참조.

표 1 2000년대 이후 호구제도 개혁과정

연도	법률 및 관련 정책	특징
2001년	소도시 호구관리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 소도시 호구제도 전면 개혁 실시 - 소도시 지표 계획 관리 폐지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0차 5개년 계획	- 농민공 차별정책 폐지 방향 제시
	농민공에 대한 비용 징수 폐지에 관한 통지	- 농민공의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실비 외 7개 항목 행정 경비 폐지
2003년	국무원 1호 문건	- 농민공 취업에 불합리한 제도 폐지
	농민공 취업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통지	- 농민공 임금 삭감 및 체불 문제 해결
	공상보험 조례	- 2004년 1월부터 농민공 포함 실시
	도시 유랑결인 구조 관리방법	- <도시 유랑결인 강제귀향 방법> 폐지와 함께 8월 부터 실시
2004년	2004년 1호 문건	- 농민공의 권익 보호 강조
	<농민의 타지 취업 및 도시취업에 대한 차별규정 및 불합리한 비용 징수를 폐지하는 통지>	- 일부 성과 시에서 농민공 취업증 및 임시거주증을 간소화하거나 폐지
2006년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의견	- 농민공의 낮은 임금, 임금체납 문제해결 규범화 - 취업 서비스, 교육, 사회보장문제 해결
2007년	도농 종합 연계 개혁 시범구 지정	- 충칭시, 청두시를 시범구로 지정
2008년	농촌 개혁 발전과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 호구제도 개혁 확대(소도시→중소도시)
2010년	2010년 경제체제 개혁 중점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	- 2010년 9대 중점 개혁 임무 중 하나로 호구제도 개혁을 지정
2011년	호구제도 개혁의 적극적, 안정적 추진에 관한 국무원 통지	- 중앙정부 방침 실행 엄수 - 소도시 호구 대폭 개방 - 직할시, 중등도시는 적절히 개방 - 특대도시는 인구관리 강화, 토지와 호구제도 개혁의 연계 금지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 2014~2020년	- '인간의 도시화'를 목표로 '3개의 1억 명' 제시 (2020년까지 1억 명의 농촌 인구에게 도시 호구를 부여하고 1억 명이 거주하는 도시 빈민촌을 개량하며,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1억 명의 인구를 도시화하겠다는 것) - 도시 규모와 농민공의 자격요건에 따라 '점수적립 호구 부여' 정책 시행

출처: 조윤영 외(2012: 163), 정규식(2019: 92)

민 간 호적 신분의 차이가 ‘사회적 신분’의 차이로 전환되면서, 중국 정부와 기업은 농민공들의 사회적 재생산 비용은 부담하지 않은 채 이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만 활용하는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도시화를 이룩한 것이다(Pun and Chan, 2013; 조문영, 2017).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 도시화’ 과정은 지역 간 불균등 발전과 도농 및 계층 간 극심한 격차를 초래했으며, 특히 농민공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도시에서의 차별적 처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해 새로운 도시화 발전 전략과 호적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민공의 사회적 불만과 저항을 정부의 사회관리 체계 내에서 통제할 ‘필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내수 소비를 확대하려는 경제발전 전략 전환의 ‘목표’가 합치된 결과이기도 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国家新型城镇化规划) 2014~2020”을 발표해 새로운 도시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사회경제 구조의 ‘거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Chu, 2020; 윤종석, 2020: 34). ‘신형도시화’ 계획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도시화’이다. 즉 ‘농민공의 시민화’를 통해 기존 도농이원구조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농민공의 도시정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Chan, 2014; Chen et al., 2016; 单卓然·黄亚平, 2013). 이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 호구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는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심지어 도시와 농촌의 호구를 통폐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조문영, 2017). 그리고 ‘농민공 시민화’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도로 ‘점수 적립식 호구 부여’[积分落户]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점수 적립식 호구 부여 정책은 관할 구역 내 취업인구 중 해당 지역 비도시 호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호구변경 신청의 각종 자질 및 실적(학력, 기술능력,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사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고, 그 총점에 따라 도시 호구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특정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제한하고, 농민공과 같은 유동인구를 중소 규모의 도시나 외곽으로 이주시키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리고 각급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들 사이에 위계

(hierarchy)가 공고해졌으며, 일정 자격의 충족으로 획득한 도시 호구를 기준으로 '위계적 시민권'이 형성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sup>4</sup> 호구 소지자와 이주자 간의 차등적 사회질서 체계를 정당화하고,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초한 도시민의 서열화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1월부터 베이징에서 시행된 '점수 적립식 호구 부여' 정책은 도시 거주민을 '단기 유동인구 - 거주중 신청인구 - 점수 적립식 호구 신청 가능 인구 - 베이징 호구인구'로 위계화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차등적으로 '(도)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섭과 배제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난다(윤종석, 2017). 베이징 호구 획득을 위한 점수 기준표를 보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 및 거주형태, 교육수준, 혁신부문 기술 보유 및 창업 기여도, 납세 정도, 나이, 직장과 거주 구역, 범법 여부 등이 중요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지표는 베이징 '도심 6구' 밖으로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첨단산업 분야에 취업한 경우 호구 취득을 위한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이다.<sup>5</sup> 이는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및 도시관리 정책과 '능력'에 기초한 호구 부여 기제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수도권 권역을 초거대 도시(megalopolis)로 육성하려는 '징진지(京津冀) 일체화'<sup>6</sup>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베이징 도심의 인구 과밀화 해소와 산업의 분산이 핵심인데, 점수 적립식 호구 부여 정책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4 '점수적립식 호구부여' 정책을 통한 중국 도시화의 문제 및 위계적 시민권 형성에 관해서는 박철현(2017)의 연구를 참조.

5 2015년 11월 17일 베이징 도시체계는 기존 현(縣)에서 16개 구(區) 체제로 변경되었는데, '도심 6구', 즉 동청(东城)·서청(西城)·차오양(朝阳)·하이톈(海淀)·펑타이(丰台)·스징산(石景山)구에 베이징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베이징 전체인구의 60%와 베이징시 '호구(戶口)'를 보유하지 않은 '외래유동인구'가 '도심 6구'에 몰려 있어 시정부의 특별 관리 지역으로 분류된다.

6 '징진지 일체화'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성(河北省)을 하나로 연결하여 초거대 도시로 육성하려는 국가급 프로젝트이다. 2014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의 인구 과밀화 및 스모그 완화를 목적으로 처음 제안하였으며, 2015년 4월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징진지 협동 발전 계획 요강」을 통과시키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베이징을 정치, 문화, 국제 교류,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공장 대부분을 외곽인 허베이성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베이성에는 일부 행정 기관과 국유기업, 첨단 제조 기지 및 물류 센터, 전략 자원 비축 기지 등을 구축하고, 톈진은 국제 항운 및 금융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드러난 것이 2017년 11월 소방과 안전을 명목으로 외지출신 노동자들의 밀집 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철거한 사건이다. ‘신형도시화’ 계획을 통해 ‘사람의 도시화’를 강조하지만, 첨단산업이 아닌 ‘3D 업종(Difficult, Dirty, Dangerous)’에 주로 종사하는 외지출신 신노동자들은 ‘저단인구(低端人口)<sup>7</sup>’로 불리며 여전히 도시에서 배제와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 2. 신노동자, ‘사회건설’에의 동원과 ‘사회 거버넌스’에서의 배제

개혁개방 과정에서 베이징의 도시건설과 발전에 피와 땀으로 헌신했던 신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는 중국 사회에서 ‘공민(公民)<sup>8</sup>의 권리’에 관한 문제 제기를 촉발했다. 특히 2천년대 이후 농민공들의 신노동자로의 주체화 과정과 이에 따른 조직적 저항이 증가하면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권리수호(维权) 투쟁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법적 권리에 기반한 공민을 주체로 ‘공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개혁 시기 중국 사회건설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공민 개념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신노동자의 집단행동이 당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다시 당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을 주체로 하는 ‘인민사회’ 건설이 시진핑 신시대 새로운 ‘사회 거버넌스(社会治理, social governance)’ 모델이 되었다. 즉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공민’이 아닌 ‘노동인민’을 주체로 하는 정치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국식 사회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것이다(장윤미, 2021).<sup>9</sup> 이에 따라 2017년 19차 당

<sup>7</sup> ‘저단인구(低端人口)’란 ‘저단산업(low-tech)’에 종사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로 주로 외지출신 농민공과 하층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2017년 발생한 베이징 ‘저단인구’ 퇴거 사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윤종석(2017)을 참조.

<sup>8</sup> 중국에서 ‘공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갖는 주체를 의미하며, 단순히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는 ‘시민(Citizen, Civil)’ 개념과는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서구 학계에서 사용되는 ‘시민사회’ 개념도 중국에서는 ‘공민사회’로 통용된다.

<sup>9</sup>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의 변천 및 그 함의에 관해서는 ‘사회적 주체’라는 관점에서 사회주의 시기 ‘대중사회’, 개혁개방 시기 ‘공민사회’, 그리고 시진핑 시기 ‘인민사회’로의 전환 과정을 분석한 장윤미(2021)의 연구를 참조.

대회에서는 “기층 당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공건·공치·공향(共建共治共享)’의 사회주의 공동체 건설과 인민이 주도하고 다원적인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新华社, 2018).

그러나 도시공간에서 배제와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신노동자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주지하듯이 ‘사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노동문제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크게 3가지 배경에서 출현했다.<sup>10</sup> 첫째, 산업경제의 주요 역군으로 부상한 농민공의 파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둘째, 노동자의 집단적인 저항이 공식적 노동조직인 ‘공회(工会, 중국 노동조합)’ 체계를 통하지 않고 전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sup>11</sup> 셋째, 당정 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 NGO’ 조직이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정부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노동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쟁의를 규범화하고 제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와 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주체인 ‘공회’에 대한 개혁이 미진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수호 행동은 여전히 ‘사회 불안정 요소’로 규정되어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즉 여전히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up>10</sup> 2000년대 이후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중국 정부의 사회관리 및 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는 사회조직의 혁신, 사회 거버넌스 주체의 다원화 등 사회 전반적인 통치체계의 변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노동영역에 대한 사회관리 방식의 변화를 다루는데,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시위가 공장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면서 노동문제 역시 거시적인 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틀 내에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백승욱 외(2015), 장영석 외(2017), 정규식(2019)을 참조.

<sup>11</sup> 중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이 ‘중화전국총공회’이다. ‘공회는 국가행정 체계와 일치하는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기층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즉 각 경제부문에 10개의 산업별 공회 전국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31개의 총공회가 있고, 총공회의 관할 아래 다시 시·구·현·기층기업 공회 등이 설립되어 있다. 한편 관방 조직답게 높은 조직율을 보이는 걸모습과는 달리, 총공회와 산하 조직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나 정서를 대변하기보다는 기업의 사용자들과 밀착되어 있거나 사용자들이 통제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규식, 2019: 16).

노동쟁의를 비롯한 노동문제도 사회의 ‘안정유지’ 차원에서만 주로 인식되고 있다(정규식, 2019). 그리고 지방정부와 자본의 유착관계로 얽혀 있는 ‘안정유지’ 체제하에서 지방정부는 외부로부터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 친화적인 입장이며, 지역 공회도 이에 부응하여 기층 노동자의 권리수호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사회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사회조직’의 활성화와 규제 완화이지만, ‘노동 NGO’ 조직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다수의 사회조직에 대해 포섭 전략을 취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노동 NGO’에 대해서는 ‘안정유지’를 명목으로 탄압과 배제의 전략을 적용하는 분할통치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정규식, 2019). 따라서 중국 정부가 ‘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강조한다고 해서 실제로 과거보다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조직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 거버넌스 체계 개혁은 당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운영 및 사회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민’들의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서비스’(빈민·양로·고아·장애인 구제, 재난구조, 의료보조, 교육 서비스 제공, 도농의 기층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등)를 제공하는 사회조직들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적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사회조직에 대한 중국 당정의 통제와 관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정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조직만이 체제 내부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포섭된 사회조직도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낮은 자율성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에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공간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정규식, 2020: 89-90). 특히 시진핑 시기 중국 당정은 당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과 영도 핵심으로서의 시진핑 개인에 대한 권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는 여전히 ‘건설’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민’은 당에 의해 설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이자, 애국 및 민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통해 개조·육성되어야 할 존재로만 호명될 뿐이다(장윤미, 2021).

무엇보다 신노동자에 대한 ‘사회건설’ 과정에의 동원과 ‘사회 거버넌스’ 체계

에서의 배제는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 기제 및 지배구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지하듯이 다원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은 도시지역 기층사회 관리체제의 변화를 수반했다. 즉 사회주의 시기 도시공간에서 통치 기제로 작동하던 '단위체제(单位体制)'에서 주민의 거주지역인 '사구(社區, Community)'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제로의 변화를 추동했다.<sup>12</sup> 기존의 '단위체제'가 소속된 직장에 기초한 관리체제였다면, '사구'는 주민의 거주지역에 기초한 정부의 기층사회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즉 '사구'는 주민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롭게 재편된 행정구역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구' 건설을 통한 기층 도시 및 사회관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일원적 거버넌스에서 다원적 거버넌스로, 집권에서 분권으로, 인치에서 법치로, 당내 민주에서 사회 민주로" 전환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반해 중국 '사구 건설' 운동은 "단지 행정이 사회를 흡수하는 과정, 혹은 국가가 사구의 실무를 유연하게 통제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즉 "도시에서 '사구 거버넌스'의 주체가 다원화되기는 했지만, 아래로부터 위로의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과 권력이 긴밀하게 결합한 왜곡된 거버넌스 방식이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다(양성, 2017). 무엇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사회관리에 활용하는 '기술 거버넌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사구' 건설 과정에서 사회조직 등 기층의 참여보다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통제방식인 '격자망화(網格化)'와 '네트워크화(網絡化)'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Mittelstaedt, 2022).<sup>13</sup>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사구' 내에 '노동쟁의 관리 네트워크 체계'를 수립해 노동문제 및 노동운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정규식, 201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사구'는 "국가의 의도와 사회의 자율성이 충돌 및 타협하는 장소이자, 단순한 거주지역을 넘어 도시의 공공영역과 관련된

<sup>12</sup> 중국 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전환과 사구 건설 과정의 지역 간 비교 및 주요 특징과 함의에 대해서는 백승욱 외(2015), 백승욱 외(2017), 조문영 외(2017), 정규식(2020)의 연구를 참조.

<sup>13</sup> '격자망화'는 도시의 지역적 공간을 격자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하고, '네트워크화'란 각 격자 단위에서 수집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정보망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규식, 2020).

통치와 행정, 자치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공간”이기도 하다(조문영 외, 2017). 그리고 도시는 “비록 국가와 시장에 의해 포획되어 있지만, 교환가치와 상품화의 논리에 저항하는 사회적 투쟁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하다(서영표, 2012). 따라서 위로부터의 ‘사회 거버넌스’ 및 ‘사구’ 건설과 신노동자들의 실질적 필요 및 요구가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마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노동자 문화 활동과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 중간사인 쑨형(孫恒)은 위로부터의 ‘제도 설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지역사회 건설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공민 개체로부터 곧장 국가 장치에 도달하는 민주주의는 직접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일상의 민주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참여하는 민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 참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사고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제도 설계가 아닙니다. 저는 ‘사구(社区, 지역사회)’ 건설이 곧 하나의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뤼투, 2018: 463).

이제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경험과 실천이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를 넘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다.

### III. ‘베이징 노동자의 집’: 도시에 대한 권리 너머

#### 1.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경험과 실천<sup>14</sup>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베이징 수도공항 근처의 노동자 밀집 지역인 피촌(皮村)에 위치하며, “신노동자 집단의 문화 구축, 다양한 교육 활동, 공동체 경제 및 상호 협력적 연합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종의

<sup>14</sup>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주요 활동에 관해서는 조직 내 주요활동가 5명에 대한 인터뷰와 이에 대한 분석이 담긴 뤼투(2018)의 저서를 주로 참조했으며, 필자가 2018년 수행한 현지 방문 조사 및 추가 인터뷰자료를 활용했다.

코민(公社)을 지향한다.<sup>15</sup> 이러한 지향성을 ‘피춘 정신’으로 통칭하며, 노동자 주체의 문화예술 공연 단체인 ‘신노동자예술단’, 노동자 자녀를 교육하는 ‘동심실협학교’, 사회적 기업인 ‘동심호혜공익상점’, ‘노동자 문화예술 박물관’, 노동자대학인 ‘동심창업교육센터’, 지역노동조합인 ‘노동자의 집 사구(社區) 공회’, 생태농원인 ‘동심도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문화가 없으면 우리의 역사가 없고, 우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노동자들의 현실적 생활과 필요에 기반한 공동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Jeong, 2021).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전개하고 있는 주요 활동은 표 2와 같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 공동체 운동의 출발점은 신노동자 집단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사회와 기업이 제도화된 방식으로 노동자를 탈사상화(去思想化)하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 뤼투(呂途)에 의하면 신노동자에 대한 ‘탈사상화’는 두 가지 공간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노동의 장소에서 공장의 제도와 문화가 노동과 사상 사이의 연관을 가로막고, 다른 하나는 생활공간에서 여가를 오락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사고 능력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현실적 생활과 필요에 기반한 신노동자 집단의 조직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뤼투, 2018: 386).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베이징 노동자의 집’ 공동체의 지향점도 명확해졌다. 즉 첫째로 신노동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社區)’를 공동체 운동의 활동 공간이자 현장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향점은 다양한 문예 형식을 통해 신노동자의 사상과 가치관 및 생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신노동자 문화’를 창도(唱導)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노동자 개인과 조직, 그리고 지역

<sup>15</sup> 현재 중국에는 ‘베이징 노동자의 집’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노동자 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컨대 ‘베이징 여공의 집’, ‘샤먼 국인 노동자의 집(廈門國仁工友之家)’, ‘텐진 노동자의 집(天津工友之家)’, ‘쑤저우 빛나는 가원(蘇州星星家園, 前 ‘쑤저우 노동자의 집’), ‘창샤 노동자의 친구 집(長沙工之友家園)’, ‘푸저우 노동자의 집(福州工友之家)’, ‘시안 노동자의 집(西安工友之家)’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규모가 가장 크고, 활동도 다양하다. 2018년 기준으로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는 동심실협학교(교직원 40여 명), 동심호혜공익상점(40명), 노동자 문화예술박물관과 피춘지역노동조합(5명), 대외연락부(2명), 동심창업훈련센터(5명), 신노동자 홈페이지(3명), 동심여공합작사(2명), 그리고 다른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 활동가(5명)들이 있다(뤼투, 2018).

표 2 '베이징 노동자의 집' 주요 활동

활동명	주요 내용 및 의의
신노동자예술단 [新工人艺术团]	2002년 결성된 공연단체. 공사현장과 노동자 단체, 농민공 자녀 학교 등지에서 창작곡으로 공연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이후 2004년부터 신노동자의 삶과 저항을 담은 음반제작, 2009년 노동자문화예술제, 2010년 폭스콘 노동자 추도회, 2012년 노동자 춘절 문화제 등을 주최함. 노동자의 목소리와 생각을 스스로 기획한 문화예술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신노동자 문화를 창도하고자 함.
동심실험학교 (同心实验学校)	2005년 개교한 비인가 실험학교.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자녀들은 호적 신분상의 이유로 도시에서 공교육을 받기 어렵기에 이들에게 기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함. '잘 배워서 좋은 사람이 되자'가 교훈임.
동심호혜공익상점 (同心互惠公益商店)	2006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 2016년 현재 전국에 15개 지점이 있으며, 여기서 거두는 수익(약 30만 위안)이 '베이징 노동자의 집' 총 운영 자금의 60%를 차지함. 경제적 자립을 통해 정부나 기업의 후원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활동 모델을 지향함.
노동자 문화예술박물관 [打工文化艺术博物馆]	2008년 설립된 중국 유일의 '농민공' 박물관. 신노동자의 노동과 도시 생활에 관한 자료(임시거주증, 작업복, 산업재해 관련 기사, 파업과 시위 현장 사진 등)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농민공의 헌신을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표방함.
동심창업교육센터 [同心创业培训中心]	2009년 개설된 창업교육 센터와 노동자 대학. 노동자를 위해 중고등 교육과정과 기술 훈련, 노동법, 사회사업 등의 교과목을 개설해 활동가 양성. 특히 노동자 대학은 1년에 두 번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15기까지는 피춘에서 떨어진 평구(平谷)의 교실에서 진행했으나, 16기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함(필자가 2018년 방문 당시 16기 온라인 수업을 참관함).
노동자대학 [工人大学]	
'노동자의 집 사구 공회' [工友之家社区工会]	2009년 창설된 지역노조. 베이징 총공회 소속으로 노동자의 도시민으로서의 요구, 즉 일상생활과 자녀교육, 사회교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창설됨. 경제적인 요구를 위해 조직된 노조와 구별되는 새로운 탐색이자 시도로 평가됨.
동심도원(同心桃园) 동심코뎌(同心公社)	2013년 '생태+공익' 이념을 지향하는 공동농장인 동심도원을 설립하고, 이후 2017년 공익사업과 사회적 기업 운영을 위해 동심코뎌를 창설함. 여기서 창출된 수익은 모두 신노동자 문화교육 사업에 사용됨.
기타 문화 공간	'베이징 노동자의 집' 안에 노동자 도서관, 신노동자 극장, 노동자 영화관 등을 설립해 노동자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함.

출처: 김미란(2016), 김정수(2017), 뤼투(2018), 박자영(2019)의 문헌 자료 및 2018년 필자가 수행한 현지 조사와 활동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사회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코뮌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설립 초기부터 지역사회에 뿌리내린다는 활동 방침을 확립했다. 이는 신노동자 집단의 사회적 상황과 조직의 능력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신노동자들에게 결핍되거나 부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통의 감각”을 형성하려는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었다(崔柯等, 2014: 72; 박자영, 2019: 212). 이를 통해 자본이 구매한 ‘노동력’이나 제도적 차별의 대상인 ‘농민공’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부모, 자녀, 부부, 이웃,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요’를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뤼투, 2018: 410). 특히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 자리한 ‘피춘’ 자체가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신노동자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뤼투에 의하면 피춘은 “분열되고, 불완전하며, 과도적인 지역사회”이다. 피춘 곳곳에 현지인(약 1,400명)과 외지인(약 2만 명) 간에, 그리고 농촌과 도시 간의 분열이 잠재해 있다(뤼투, 2018: 417). 더욱이 베이징시 정부의 도시관리 정책에 따라 강제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에 외지인들끼리도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sup>16</sup> 이러한 환경에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피춘’이라는 도농 경계의 신노동자 집단 거주지를 역설적으로 하나의 ‘가능성의 공간’으로 사유한다. 즉 ‘피춘’이라는 지역사회를 근거지로 새로운 생산방식을 고민하고, 재생산의 필요를 자율적으로 충족하며, 이를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버넌스 구조를 창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신노동자 문화’의 창도를 지향한다. 뤼투는 ‘신노동자 문화’의 함의를 주체성, 가치관, 기능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신노동자 문화의 주체는 신노동자 자신이며, 자본의 문화와 패권에 반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뤼투, 2018: 420-421). 먼저 주체의 측면에서

<sup>16</sup> 2016년 12월 현지 촌위원회로부터 ‘베이징 노동자의 집’ 철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게 계약을 파기할 것을 압박하고 단전/단수 조치도 취해졌다. 사건 발생 후 ‘베이징 노동자의 집’ 활동가를 비롯한 여러 지식인과 단체들의 공동대응으로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베이징시 정부의 도시개발 및 관리 정책과의 갈등으로 여전히 강제철거 위기가 상존한다(清华大学求是学会, 2016).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어졌던 수동적이고 차별적인 ‘농민공’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노동자’로 호명하며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신’노동자는 과거 사회주의 시기 ‘국가의 주인공’으로서 안정적 지위와 사회복지를 향유했던 국유기업 노동자(工人)와도 다르며, 개혁개방 이후 부유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농민공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도시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주체화 과정의 표현인 것이다(汪建华·黄斌欢, 2014; 王海侠·孟庆国, 2015). 그리고 자본의 문화적 패권에 대항해 “독립 자주, 자력갱생, 상호협력”을 신노동자 문화의 핵심 가치관으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문예 형식을 통해 전파한다. 이처럼 ‘신노동자’라는 개념에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창조하려는 갈망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노동자의 집’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코뮌의 이상(理想)을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적 차원 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지향은 쑨형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반드시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컨대 전체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상 활동이 그러하다. 또한 사회적인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 조직 자신의 발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소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다. 물론 자기 발전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기초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모순과 통일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 조직 자신도 발전해야 하지만, 발전의 목적이 ‘베이징 노동자의 집’을 위한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집’의 역사와 가치의 의미는 노동자를 위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뤼투, 2018: 549).

뤼투의 말처럼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코뮌 건설 운동은 공허한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며, 모든 활동가의 장기적인 실천과 경험이 응축된 ‘문화적 전투’이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며, “막막함과 좌절, 고민과 행동”이 뒤엉켜 있다(뤼투, 2018). 무엇보다 ‘신노동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논쟁적이며, 이들의 문화적 실천과 운동도 여전히 탐색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구체적 ‘필요’로부터 출발한 ‘베이징 노동자의 집’ 코뮌 공동체의 경험과 실천이 주는 함의

는 작지 않다. 위로부터의 도시발전 및 도시관리 정책과 마주치면서 전개되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 운동을 통해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아 있을 수 없는 도시'와 '돌아갈 수 없는 농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중국 신노동자들이 도시에서의 기본적 권리 박탈과 '이등 시민'으로서의 신분적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어떠한 '저항의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뤼투가 강조하듯이 신노동자들이 더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사회집단이 아닌, 새로운 변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중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 2. '피춘정신'의 계승과 정치사회적 함의

앞서 언급했듯이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 자리한 '피춘'은 베이징시 정부의 도시개발 및 관리 정책으로 강제철거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미 피춘의 주변 지역은 거의 철거 되었고, 보상금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 표방하는 공동체 문화, 즉 '피춘정신'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며, 또 이것이 갖는 정치사회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뤼투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피춘은 소멸할지 몰라도 '피춘정신'은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남은 날이 길지 않은 듯하다. 피춘은 곧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그런데도 피춘 지역사회 활동센터는 매일 열려 있다. 지역노조의 일상 활동도 기세등등하고, 동심 실험학교의 교육 활동도 왕성하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소멸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피춘이 계속 존재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원주민과 새로운 주민이 함께 노력해 더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바람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도 활동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조직이 단련·육성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새롭게 합류하게 했다. **둘째, 실천은 모든 것을 검증하는 기준이다.** 이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행동이 없으면 탁상공론일 뿐이다. 실천 속에서 거짓을 없애고 진리를 남길 수 있으며, 현실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셋째, 경험은 축적된다. 동심실험학교의 허가가 취소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만든 경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넷째, 물질적 피춘이 소실되더라도, ‘피춘 정신’이 남는다. 피춘은 소실될 수 있지만, 우리의 피춘 생활은 일찍이 존재해 왔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다(뤼투, 2018: 464)(강조는 인용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베이징 노동자의 집’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조직’의 육성, 즉 주체화 과정 자체다. 이들은 이제까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수동적 농민공에서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신노동자’로 각성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국가 제도와 자본 논리가 규정하고 허용하는 ‘권리’를 넘어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상상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며, 노동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직접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실행하는 길을 열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허용하지 않은 삶을 상상하고 실행하면서, 현실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박자영, 2019: 213). 예컨대 농민공 자녀에게 결핍된 의무교육 제도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학교를 설립해 이를 ‘비판적 교육’ 이념을 체현하는 공간으로 전유한다(뤼투, 2018: 456). 또 노동자 대학의 학생들과 ‘베이징 노동자의 집’ 자원봉사자 및 사회공작(社会工作)<sup>17</sup>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소모임 등을 통해 활동가를 육성하고 재생산한다. ‘동심실험학교’ 교장인 선진화(沈金花) 자신도 ‘사회공작’ 실습 과정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베이징 노동자의 집’ 핵심 활동가로 ‘뿌리’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일궈 낸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생태농장 등에서 창출된 수익을 통해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생산과 재생산 방식을 고민하며 실천

17 ‘사회공작’은 영어로 ‘social work’에 해당하며,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로 주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공작은 구미나 홍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당-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제도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공작’은 정부 바깥의 독립적, 전문적 서비스 영역으로 주로 인식되는 ‘사회복지’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문영은 농촌 출신 대졸 청년들로 구성된 일선 사회공작자들의 강제된 유동성을 활용한 구조적 착취 문제를 지적한다(조문영, 2015).

하고 있다.

한편 '피춘정신'은 물리적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신노동자예술단'은 순회공연을 통해 각 지역의 공익조직 및 노동단체와 교류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미디어를 활용해 '피춘'의 경험을 신노동자 공동의 경험으로 확산하고 있다(郭春林, 2016; 赵月枝·吴畅畅, 2016). 그리고 뤼투의 주도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 대학'은 2018년 16기부터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화상대화도 가능함)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필자가 뤼투를 방문했을 때,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아 16기 2조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선전의 폭스콘 공장에서 일하는 20대 소녀부터 수십 년간의 떠돌이 노동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서 생태농업을 하는 중년 남성, 품팔이 노동자였다가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가난한 마을의 촌관(村官)<sup>18</sup>이 된 청년, 베이징의 한국인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중년 여성, 농민공 아버지가 있는 법학전공 대학생까지 구성원이 다양하다. 수업은 주로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사전 학습자료를 공유한 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토론을 하거나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뤼투에 의하면 이러한 토론과 대화는 "사상의 표현이자 충돌"이다(뤼투, 2018: 42). 즉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되뇌면서 신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성찰하고, 또 이를 공유함으로써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신노동자 집단의 미래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을 비롯한 신노동자 집단의 실천과 운동이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킬 역량이 있는지의 질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왕후이(汪晖)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항의에서 신노동자의 집단의식이 싹트고 있는 있지만, 아직 정치적 계급을 형성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汪晖, 2014). 즉 신노동자 집단은 20세기 노동자 계급이 갖고 있던 강렬한 정치의식이 없으며,

<sup>18</sup> '대학생 촌관'이라고도 불린다. 광저우 등의 지방정부에서 2000년에 시행됐고, 2005년부터는 중앙정부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이 제도는 당해 전일제 대학 학부 졸업생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촌 단위의 당 지부 서기 보조 혹은 주임 보조 등의 직무를 맡게 하는 정책이다. 촌관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특수 직무 인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재직 기간 중 태도와 성과가 우수한 촌관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등의 특혜가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 영도계급의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희망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또 다른 산물인 ‘신빈민’(주로 일정한 교육 배경과 계층 상승의 꿈을 안고 있고, 소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함)과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도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주로 광둥(广东) 지역에서 발생한 신세대 농민공의 파업과 저항은 이들이 점차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민권 획득을 위한 ‘권리 보호’의 성격을 넘어 사회변혁을 촉진하려는 조직적 운동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하남석, 2020: 91). 더욱이 2018년 선전(深圳)시에 소재한 제이식(佳士科技股份有限公司, Jasic Technology) 기업에서 독립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정부와 회사 측의 탄압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이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모습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도 감지된다(홍명교, 2021). 무엇보다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현실적 ‘필요’와 ‘자각’에 기초한 실천 운동은 그 자체로 포스트 사회주의 시기 중국의 도시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계속해서 축적되어 ‘피춘정신’으로 계승되고 존재할 것이다.

#### IV. 나가며

본 논문의 서두에 인용한 ‘접는 도시’ 속 베이징의 미래 모습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초래된 도시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단절’을 현실에서 떠올리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19년 신년 담화에서 ‘유동의 중국(流动的中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동하는 중국은 번영과 발전의 활력으로 가득하며, 우리 모두 있는 힘껏 꿈을 좇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彭心樞, 2019). 그러나 ‘유동 중국’의 꿈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의 버팀목으로서만 조명되었고, ‘유동’이 초래한 사회적 단절과 신노동자에 대한 도시에서의 차별 및 배제는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 정부의 통치 이념과 사회건설의 방향과도

연결된 문제이기에도 더욱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지난 2021년 11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과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는 시진핑 집권기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 나갈 시대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층 당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공건·공치·공향(共建共治共享)’의 사회주의 공동체 건설과 ‘인민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한다(新华社, 2021).

그러나 오히려 시진핑 집정 이후 중국의 지식 담론 및 정치 사회적 공간은 폐쇄되거나 체제의 통제에 잠식되어 있으며, 신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조직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채 외, 2021). 무엇보다 당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과 영도 핵심으로서의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에 매진하는 중국 공산당에게 ‘사회’는 여전히 ‘건설’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민은 당에 의해 설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이자, 애국 및 민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통해 개조·육성되어야 할 존재로만 호명될 뿐이다(장윤미, 2021).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그리는 사회주의 신시대의 미래는 결코 위로부터의 ‘사회건설’과 이를 위해 ‘배양된 주체’들의 단편적 행위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당-국가)의 꿈’에 포획되지 않은 복수의 중국 사회(들)와 인민의 향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국가의 통치 이념이나 엘리트 정치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주체의 행위와 동역학(dynamics)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농민공’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하고, ‘신노동자’로 자신들을 호명하며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신노동자 집단의 문화적 경험과 실천을 위로부터의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즉 ‘베이징 노동자의 집’의 공동체 운동과 실천 사례를 통해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로부터의 도시관리 정책과 신노동자의 저항이 도시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어떻게 마주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사회주의 시기부터 계속된 ‘도농이원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신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도시에서의 제도적·신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들의 사회적 불만과 저항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정치적 안정을 이

루기 위해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분석한 ‘신형도시화’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도시화 정책은 또 다른 차등적 사회질서와 시민권의 위계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사람의 도시화’라는 수사적 표현과 달리, 도시공간에서 여전히 축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신노동자들은 ‘공민으로서의 권리’도 ‘인민의 주체적 지위’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사회건설’ 과정에만 동원되고 ‘사회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베이징 노동자의 집’은 위로부터의 ‘제도 설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지역사회 건설을 표방하며 신노동자 문화 활동과 공동체 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함의가 있다. 즉 ‘피춘’이라는 지역사회를 근거지로 새로운 생산방식을 고민하고, 재생산의 필요를 자율적으로 충족하며, 이를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버넌스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까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수동적 농민공에서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신노동자’로 주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노동자 개인의 주체화로부터 신노동자 집단의 조직화, 나아가 사회적 변화까지 추동하는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코뮌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실천과 경험은 국가 제도와 자본 논리가 규정하고 허용하는 ‘권리’를 넘어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상상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위로부터의 도시발전 및 도시관리 정책과 마주치면서 전개되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 운동을 통해 도시에 대한 ‘관리’와 ‘권리’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가능성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집필을 완료한 후, 지인을 통해 ‘베이징 노동자의 집’에서 운영하는 ‘노동자 문화예술박물관’이 결국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처럼 정부의 탄압과 개발의 논리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비틀거리며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집합적 사회운동’은 중국 신노동자들이 도시정치와 사회변혁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귀중한 유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베이징 노동자의 집’ 공동체 운동이 갖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작업은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의 집’ 활동이나 노동운동 사례들과의 비교분석 또

한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다.

투고일: 2022년 6월 2일 | 심사일: 2022년 7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9일

##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김미란. 2016. “중국 노동자문화운동의 현장. 피촌 방문기.” 『황해문화』 91호, 299-318.
- 김정수. 2017. “중국 ‘신노동자’ 집단정체성 형성의 문화정치적 함의.” 『중국문화연구』 제35집, 69-94.
- 뤼투 저. 정규식 외 역. 2017.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나뭇박스.
- \_\_\_\_\_. 정규식 외 역. 2018.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 변화하는 농민공의 문화와 운명』, 나뭇박스.
- 박민호. 2015. “피촌(皮村)과 중국의 새로운 노동자 문화.” 『중국학연구』 제74집, 265-284.
- 박자영. 2019. “이천년대 이후 중국노동자 문화현실과 담론연구: 베이징 피촌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제76집, 199-227.
- 박철현. 2017. “중국에서 도시민이 된다는 것: 위계적 시민권과 서열화.”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역사비평사.
- 백승욱·김판수·정규식. 2017. “중국 동북지역 사회관리 정책의 당·정 주도성.” 『현대중국연구』 제19권 2호, 337-367.
- 백승욱·장영석·조문영·김판수. 2015. “시진핑 시대 중국 사회건설과 사회관리.” 『현대중국연구』 제17권 1호, 1-51.
- 서영표. 2012.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연구』 제9권 제4호, 68-102.
- 윤종석. 2017. “베이징은 어떤 시민을 원하는가?: 외래인구 사회관리와 2017년 ‘저단인구’ 퇴거 사건.” 『사회와 역사』 제116집, 53-94.
- \_\_\_\_\_. 2020. “중국 신형도시화의 전환적 함의: ‘사람의 도시화’와 모빌리티 패러다임.” 『중국사회과학논총』 2(2), 31-55.

- 잉싱(應星) 편. 장영석 역. 2017. 『중국사회』, 사회평론.
- 메리필드, 앤디 저. 김병화 역. 2015. 『마주침의 정치』, 이후.
- 장영석·백승욱. 2017. “노동자 집단적 저항의 일상화와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 광둥성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3권 2호, 231-276.
- 장윤미. 2012.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중국 신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각.” 『현대중국연구』 제14집 1호, 83-117.
- \_\_\_\_\_. 2021.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 구상: ‘균중노선’과 새로운 ‘인민’ 주체의 창조.” 『현대중국연구』 제23집 2호, 253-300.
- 정규식. 2019. 『노동으로 보는 중국』, 나람북스.
- \_\_\_\_\_. 2020. “중국 동북지역 도시공간의 재구성과 사회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 『만주연구』 제29집, 63-95.
- 조문영. 2015. “혼종. 효용. 균열: 중국 광둥 지역 국가 주도 사회건설에서 사회공작(사회복지)의 역할과 함의.”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111-150.
- \_\_\_\_\_. 2017.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역사비평사.
- 조문영·장영석·윤종석. 2017. “중국 사회치리 확산 속 동북지역 사구건설의 진화: 노구사구(老舊社區)의 모범화.” 『중소연구』 41권 2호, 181-223.
- 조운영·정종필. 2012.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한계: 외자기업부문 농민공 집단저항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4권 4호, 125-153.
- 첸, 제니·마크 셸던·푼 아잉이 저. 정규식 외 역. 2021. 『아이폰을 위해 죽다』, 나람북스.
- 하남석. 2020. “시진핑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도시인문학연구』 제12권 1호, 87-112.
- 하오징팡 저. 강초아 역. 2018. 『고독 깊은 곳』, 글항아리.
- 홍명교. 2021.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빨간소금.
- 国家统计局. 2021. “2020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中国政府网.
- 郭春林. 2016. “形式的文化政治意义: 试论新工人艺术团音乐实践的形式.” 『文艺理论研究』 第3期, 150-160.
- 单卓然·黄亚平. 2013. “‘新型城镇化’概念内涵, 目标内容, 规划策略及认知误区解析.” 『城市规划学刊』 第2期, 16-22.
- 孙立平. 2012. “我们在开始面对一个断裂的社会?” 『360doc个人图书馆网站』, [http://www.360doc.com/content/07/0104/14/16099\\_318139.shtml](http://www.360doc.com/content/07/0104/14/16099_318139.shtml)(검색일: 2016. 12.

23.).

- 新华社. 2018. “习近平在学习贯彻党的十九大精神研讨班开班式上发表重要讲话.” 2018/01/05. [http://www.gov.cn/zhuanti/2018-01/05/content\\_5253681.htm](http://www.gov.cn/zhuanti/2018-01/05/content_5253681.htm)(검색일: 2022. 5. 13.).
- \_\_\_\_\_. 2021. “〈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全文.” 2021/11/18. [http://www.sl.gov.cn/xw/jryw/202111/t20211118\\_71721340.html](http://www.sl.gov.cn/xw/jryw/202111/t20211118_71721340.html)(검색일: 2022. 5. 13.).
- 王德培. 2022. “城市化率已近65%，二次城市化如何展开.” 『新浪财经』. 2022/02/10. <https://baijiahao.baidu.com/s?id=1724352244093845579&wfr=spider&for=pc> (검색일: 2022. 5. 15.).
- 汪建华·黄斌欢. 2014. “留守经历与新工人的工作流动: 农民工生产体制如何使自身面临困境”. 『社会』第34卷, 88-104.
- 王海侠·孟庆国. 2015. “社会组织参与城中村社区治理的过程与机制研究: 以北京皮村‘工友之家’为例.” 『城市发展研究』22卷 11期, 114-119.
- 汪晖. 2014. “两种新穷人及其未来: 阶级政治的衰落, 再形成与新穷人的尊严政治.” 『开放时代』第6期, 49-70.
- 赵月枝·吴畅畅. 2016. “网络时代社会主义文化领导权的重建?: 国家, 知识分子与工人阶级政治传播.” 『開放時代』第1期, 119-140.
- 中国国务院研究室课题组. 2006. 『中国农民工调查报告』. 中国言實出版社.
- 崔柯 等. 2014. “春晚: 新民俗与文化共同体.” 『文藝理論與批評』第3期, 70-79.
- 清华大学求是学会. 2016. “工友之家的非意外死亡之路.” 2016/12/20. [https://mp.weixin.qq.com/s?\\_\\_biz=MzA5NDAxNDkxOQ==&mid=2653608074&idx=1&sn=13c6e67dd324351a6f7bdf59098d6064&chksm=8b8b6422bcfed3418441373fd2ce18c2915710081dbfbaecd7b9e8cf312087f8056abaa272d&mpshare=1&scene=5&srcid=1220FpWpE8ssBJRiBWdCZkKi#rd](https://mp.weixin.qq.com/s?__biz=MzA5NDAxNDkxOQ==&mid=2653608074&idx=1&sn=13c6e67dd324351a6f7bdf59098d6064&chksm=8b8b6422bcfed3418441373fd2ce18c2915710081dbfbaecd7b9e8cf312087f8056abaa272d&mpshare=1&scene=5&srcid=1220FpWpE8ssBJRiBWdCZkKi#rd)(검색일: 2022. 5. 13.).
- 彭心韞. 2019. “中国为什么被称为‘流动的中国?’” 〈人民网〉 2019/09/02. <http://politics.people.com.cn/n1/2019/0902/c429373-31331824.html>(검색일: 2022. 5. 13.).
- Chan, Kam Wing. 2014. “China’s Urbanization 2020: A New Blueprint and Directio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5(1), 1-9.
- Chen, Mingxing, Weidong Liu and Dadao Lu. 2016.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in China’s New-Type Urbanization.” *Land Use Policy* 55, 334-339.
- Chu, Yin-wah. 2020. “China’s New Urbanization Plan: Progress and Structural

Constraints.” *Cities* 103, 1-10.

Jeong, Kyusik. 2021. “Asian Workers’ Solidarity and Cultural Exchang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The Newsletter 88 Spring. <https://www.ias.asia/the-newsletter/article/asian-workers-solidarity-and-cultural-exchange>(검색일: 2022. 4. 15.).

Ngai, Pun and Jenny Chan. 2013. “The Spatial Politics of Labor in China: Life, Labor and a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112(1), 179-190.

Mittelstaedt, Jean Christopher. 2022. “The Grid Management System in Contemporary China: Grass-roots Governance in Social Surveillance and Service Provision.” *China Information* Vol. 36(1), 43-61.

## Abstract

## Beyond 'Management' and 'Rights' to the City: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Beijing Worker's House Commune

Kyusik Jeong Sungkonghoe University

This paper elevates the community movement of the Chinese 'New Workers' group in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urban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is, we attempt to find a theoretical and practical opportunity to imagine beyond 'management' and 'right' to the city. Due to the contradiction of the 'Urban-Rural Dual Structure', new workers are experiencing poor working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and identity discrimination in cities. Accordingly,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push for a new urban development strategy to achieve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socio-political stability by 'managing' their social complaints and resistance. However, the state-led urbanization policy is causing another differential social order and hierarchization of citizenship. In other words, new workers, who are still considered targets of ouster in urban space, are mobilized only in the 'social construction' process and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governanc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Beijing Workers' House" is experimenting with a governance structure that considers new production methods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autonomously meets the needs of reproduction, and jointly operates them. Their practice and experience are noteworthy in that they imagine and practice new types of lifestyles beyond the 'rights' defined and allowed by the state system and capital logic.

**Keywords** | Chinese new workers (Xingongren), Beijing Worker's House, Urban-Rural Dual Structure, hierarchization of citizenship, rights to the city, social governance